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 정책연구 2025

INPOM
Institute of NonProfit Organizations Management
비영리경영연구소



함께하는 공익활동, 변화를 만드는 경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잘 사는 공존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를 지탱하는
비영리 일자리의 현실은 여전히 취약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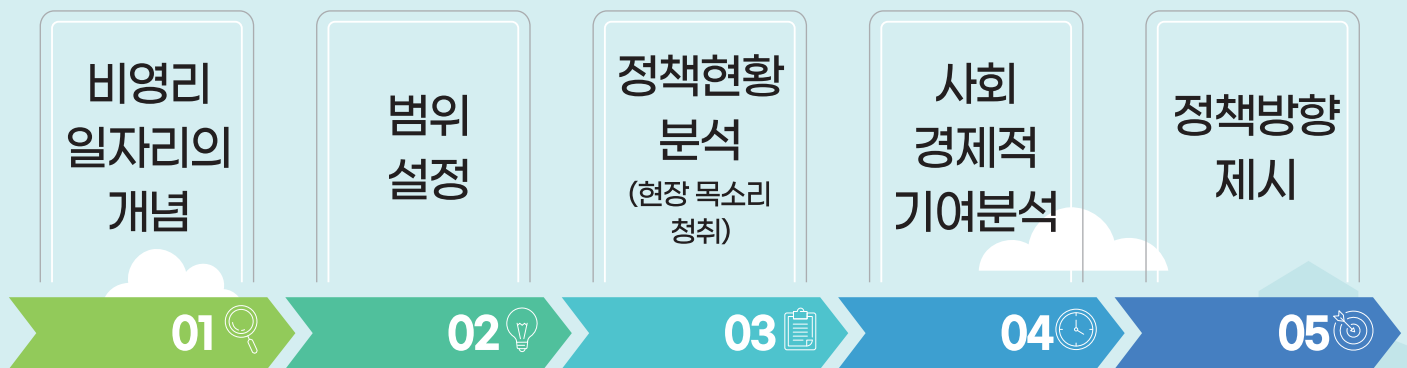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일해도
생계가 어려워 오래 버티기 힘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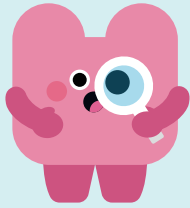
현장에서 쌓은 전문성과 경력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게다가 '일자리'로 보지 않아
정책 지원은 적고 규제는 많습니다.

시민사회의 역할이 커지는 지금,
비영리 일자리의 기반을 살펴보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과정은





비영리 일자리 개념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수익 배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조직에서
일정한 보상을 받고 수행하는 **유급노동**을 의미.

이는 자원봉사나 임시활동과 구별되며,
사회문제 해결, 공동체 지원, 시민 권익 보장 등을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한 **직업활동**을 말함.

비영리 일자리의 범위



비영리 일자리

비영리법인

(사단, 재단, 공익법인, 특수법인 등)

비영리민간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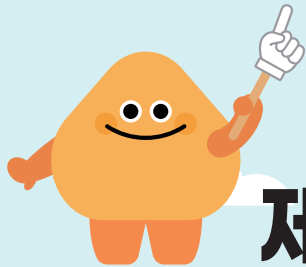
임의단체

사회적경제조직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 * 정부 기관(GO)이 아닌 조직(NGO)이면서 수익추구 조직(PO)이 아닌 조직(NPO)
- * 수익 활동을 하지만, 수익 추구가 주목적이 아닌 조직 포함
- * 잉여금의 분배 제한과 지역사회 귀속(공익사업 사용 및 지역사회 기여)을 규정하는 사회적경제 포함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정책현황



**“지원체계는 있으나,
제도적·관행적으로 배제”**

비영리 조직의 현실(업무특성, 재정구조의 열악함 등)과
괴리된 정책

청년활동가 중심의 지원대상의 한계

무엇보다도 '일자리'로 인식하지 못하는데에서 오는
정책의 공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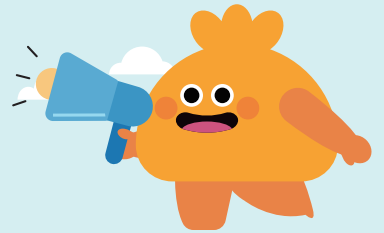
“열악함은 알고 있지만, 시스템이 없다”

“
낮은 임금·높은 소진·
경력 인정 부족
”

”
수직적 조직문화,
중간관리자 부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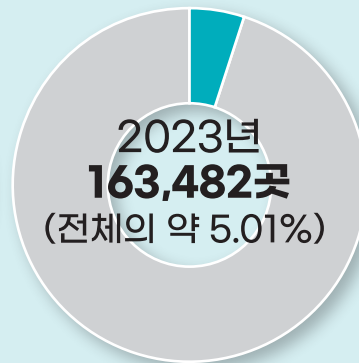
“
비영리 영역과 활동에 대한
행정의 낮은 이해도
”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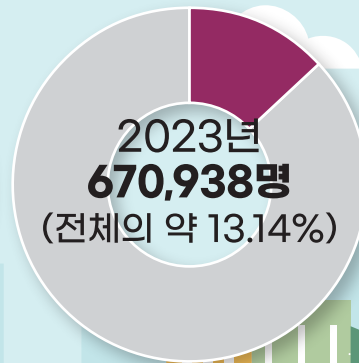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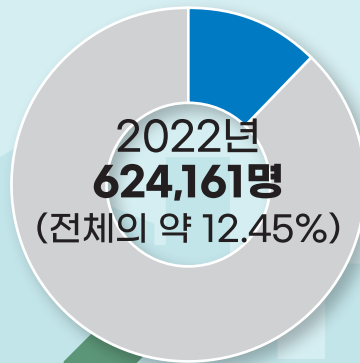


“작지 않다. 이미 하나의 산업 규모”

◉ 사업체



◉ 종사자



비영리 일자리는 이미 상당한 규모이고 경제적기여를 하고 있다!!

“투입 대비 고용유발 효과가 높다”

(2022년 기준)



* GRDP(지역내총생산)는 생산측면의 부가가치로서 각 시/도 내에서
경제활동별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가 발생되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임

① 개념·제도 기반 강화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
제도적으로 인정해야 시작된다**

비영리
일자리 관련
조례 제정

공익활동가
사회적
인정·경력 인증

비영리 부문 참여
가능한
일자리 정책 확장



② 지원체계 구축

전담 기구 + 플랫폼이 필요하다

경기도
비영리일자리센터
설립

생애주기
맞춤형
경력관리

비영리 일자리
플랫폼 구축
(매칭·교육·데이터)



③ 일터 개선·보상 강화

안정성과 지속성이 핵심

활동가
건강검진·쉼
지원

작업환경
개선

기회소득
지급으로
생활 안정성 보완



④ 지역 기반 거버넌스

사·군 단위까지 확산되는
비영리 생태계

사·군 조례에
‘비영리 일자리’
명시

지역 단위
맞춤형 일자리
모델 확산

민간·지역 주도
사회연대기금
조성



비영리 일자리는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익적 역할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고용효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로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단단한 시민사회를 위한
토대를 만들어 가야합니다.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 정책연구 결과 보러가기



바로가기

